

# “아시아인종차별 범죄에 사법처리”

석인희 기자

(사회)

▶ LA시 ‘시민인권부’ 신설, 상임디렉터 매독스 변호사 “소수계 주민보호 최선”



카프리 매독스 LA시 시민인권부 상임 디렉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 아시아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종차별 및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LA시정부가 ‘시민인권부’를 새로 신설해 아시아계를 포함한 소수계 대상 인종차별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시가 최근 설립한 ‘시민인권부(Civil and Human Rights Department)’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소수계 언론을 대상으로 한 긴급 라운드 테이블이 8일 홍보 및 컨설팅 회사 케이시 스트래터지스(KACIE·신디 신 대표) 주최로 열렸다.

이날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한 LA시 시민인권부의 카프리 매독스 상임 디렉터는 “LA시는 다양성이 강점인데 백인들에 비해 다수의 주민들은 주택, 교육, 고용, 상업 부분에서 불평등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독스 상임 디렉터는 “우리 위원회는 인종차별 관련 지역사회 행사들을 지원하고, 사법권을 이용해 인종차별 범죄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인권부는 지난해 6월 설립돼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새로 설립된 시민인권부를 이끌 첫번째 상임 디렉터로 카프리 매독스 변호사를 임명했다.

매독스 상임 디렉터는 “불평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여러 지역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소수계 주민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등(equality)보다 공정(equity)의 가치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매독스 상임 디렉터는 이날 라운드 테이블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아시아계 주민들을 향한 인종차별 사건, 범죄가 특히 증가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침묵해서는 안된다”며 “인종차별을 다루는 단체 등에 연락을 취해 사건을 공론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인 주민 대상 인종차별 대처를 위해 개설된 ‘스탑 AAPI 헤이트’(웹사이트 [stopaapihate.org](http://stopaapihate.org))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3개월 동안 발생한 반 아시아인 증오범죄는 총 832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폭행도 81건이나 됐고 민권 침해 사건도 64건을 기록했다.

이 사이트에 신고된 사례들에 따르면 미국내 아시아계를 향한 인종차별 및 증오범죄 사건들은 매장 같은 상업 지역과 공공장소는 물론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상과 줌 화상회의 해킹 등을 통해서도 이뤄지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석인희 기자

◇